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49-1호 2003년 1월 30일

제목1: 2002년도 도축검사실적

□ 주요 축종별 도축실적

- 소 : 633,024두(한우 448,594, 유우 173,732, 육우 8,801, 교잡우 1,897)
 - 전년도 대비 13%(729,245두) 감소
 - ※ '99~'00년 암소도축 증가로 송아지 생산 감소에 따른 도축량 감소
- 돼지 : 15,338,432두(암 7,634,394, 수 7,704,038)
 - 전년도 대비 7%(14,324,271두) 증가
 - ※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3%증가가 도축량 증가요인으로 판단
- 닭 : 497,311,910수(암 287,600,324, 수 209,711,586)
 - 전년도 대비 12%(442,870,253수) 증가
 - ※ 도축량 증가요인이 종계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6%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말 : 277두(암 75, 수 202)
 - 전년도 대비 32%(210두) 증가
- 양 : 17,131두(암 8,880, 수 8,251)
 - 전년도 대비 1%(17,309두) 감소

□ 축종별 절박도살 두수(507두)

- 한우 137두(광주3, 경기16, 강원7, 충북1, 충남45, 전북1, 전남7, 경남57)
- 유우 369두(경기120, 강원9, 충남141, 전남7, 경남92), 육우 1두(충남1)
 - ※ '01년 절박도살두수(754두) : 한우270, 유우482, 교잡우2
 - 전년도 대비 33%감소 : 절박직전 미리 도축장 출하 등 긴급도축으로 절박도살 두수 감소한 것으로 예상

□ 자가소비 및 학술연구용 도축 두수(3,990두)

- 한우 81두(경기74, 강원4, 전남3)
- 유우 19두(경기18, 강원1)
- 교잡우 11두(경기11)
- 돼지 3,879두(인천74, 경기333, 강원733, 충북358, 전북21, 전남203, 경남2,157)
 - ※ '01년 자가소비 및 학술연구용 도축두수(855두) : 한우160, 유우12, 교잡우10, 돼지673두
 - 경남도에서 자가소비용 돼지를 농가에서 도축하는 것을 위생상태를 고려하여 도축장에서 작업토록 유도함으로써 367% 증가.

발체: 농림부

제목2: 호주산 수입생우 288마리 부산 도착

외국산 살아있는 소(생우.生牛) 수입이 허가된 뒤 4번째로 호주산 생우 280여마리가 부산에 도착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은 지난 8일 호주 캔버라항을 출발한 호주산 수입생우 847마리 가운데 288마리가 26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도착해 하역된 뒤 검역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들 호주산 수입생우는 현지에서 결핵과 블루팅 등 9가지 질병 보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다고 판정받았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에서 보름가량 같은 질병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정식통관돼 다음달 중순께 전북 진안군 모농원에 입식될 예정이다. 함께 수입된 나머지 559마리는 조만간 인천항에 도착, 같은 절차를 거쳐 입식될 예정이다. 국내 농가에 입식된 수입생우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뒤 '수입산 국내 비육우'로 표시돼 유통된다.

호주산 수입생우는 지난 2001년 4월과 5월 두차례 반입됐으나 농민반발과 질병 등으로 농가에 입식되지 못하고 농협에 전량수매돼 도축됐으며 지난해 10월 세번째인천항으로 반입된 호주산 생우 563마리는 현재 모 농장에 입식돼 사육중에 있다.

발체: 양돈진흥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49-2호 2003년 1월 30일(목)

제목3: 盧 "농림부공무원 전원 사표 써오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4일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쌀 문제등 농업 정책 실패에 대한 공무원 책임을 지적하면서 "농림부 공무원들은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 첫 업무보고를 할 때 모두 사표를 써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개방화 시대 농어촌 대책' 주제의 국정정보대회에서 "우리나라 농업문제가 오늘처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데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농림부가 유기농법 등 친환경 농업 체제에 대해 보고하자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관료사회의 무책임 풍토를 강하게 질책했다. 노 당선자가 '사표 발언'을 하는 순간 공무원들은 아연실색하는 표정이었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팽팽 얼어붙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쌀 개방은 86년부터 예측됐던 일인데도 아직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농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흔히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눈앞에 강물이 있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더듬기 식 수법으로 하면 안 된다"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래도 안되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모두 그만둔다는 각오로 농업정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농업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사표 쓸 각오로 일하라고 했다"며 "쌀 개방에 따른 농가 수입 보전 대책이 미비한 데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 농림장관과 김호식(金昊植)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농림부 해양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발췌:동아일보

제목4: 도축장 HACCP 7월 적용 - 무더기 행정조치 불보듯

오는 7월부터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되면 행정조치를 받는 도축장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까지 HACCP 적용 대상 도축장 72개소중 63개소가 적용을 추진함으로 적용대상 기준 87.5%에 달하나 오는 6월말까지 HACCP적용에 들어가야 하는 도축장 162개소중에는 39%에 불과하다.

이는 오는 6월말까지 HACCP적용을 완료해야 되는 도축장이 전체 도축장 162개소중 55.6%인 90개소에 달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000년 7월부터 도축규모별 단계적으로 HACCP의무적용을 한지 2년이 지났지만 63개에 불과하다"며 "영세한 규모의 나머지 99개 도축장이 6개월내에 HACCP 적용을 완료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2002년 하반기에도 HACCP적용대상 도축장중 적용이 미흡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사업자중 9개소는 영업정지, 15개소는 과태료처분, 22개소는 경고, 57개소는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HACCP 미적용은 과태료 100만원, 자체 위생관리기준이 없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이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에 처한다.

발췌:농수축산신문